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사회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wylee@kyungnam.ac.kr

I. 문제제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4·27 남북정상회담은 적대적 대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몇 년을 생각한다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안팎을 지배하여 왔기에,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판문점을 거니는 장면은 감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모양 좋게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적대적 갈등관계가 하루아침에 평화적 공존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7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나아가 북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내부와 남한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당국자 간의 관계로 표출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지향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남한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일지배 체제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II. 남한 사회에 미친 영향

근본적으로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비록 북한핵 해결이 국가와 사회적인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으나, 일상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통일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이후 연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성취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보수적인 남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어우러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반공이나 반복보다 더 심한 ‘혐북(嫌北)’이 이야기될 정도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었고, 특히 취업문제 등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였다.¹⁾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성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²⁾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지향하더라도 이를 추동할 사회적 동력이 부족하였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예술단이 교환 방문하여 공연하며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회문화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예술단 공연이나 올림픽 참가 등은 장기간에 걸친 교류 부재에서 비롯된 일회성 관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시민들은 정파와 이념에 상관없이 정부의 대북정책, 즉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 국회에서 집권당이 소수당인 정치적 현실에서도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이 80%(매우 긍정적 22.3%, 다소 긍정적 57.7%)에 달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1%(매우 부정적 1.2%, 다소 부정적 0.9%)로 매우 낮았다. 변화 없다는 의견은 18%였다.⁴⁾ 북한에 대한

1) 이내영 외, 「통일인식에 대한 세대격차의 원인분석과 갈등해소를 통한 국민통합방안」 『통일부 연구보고서』, 2015; 김병로,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통일평화연구원, 2015 참조.

2) 60% 정도가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표출되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3892>, 검색일: 2018. 5. 10).

3) 각종 조사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여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63>, 검색일: 2018. 5. 9).

인식이 부정적이고 세습된 권력으로서 억압적 독재 체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미디어들이 형성한 이미지에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그 토대가 취약하였기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생중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한 결과이다. 따라서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과 연동되어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II.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북한이 유일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이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실제로 국가가 비대한 반면 시민사회는 미약한 것이 북한의 현실이기는 하다.⁵⁾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젊은 세대와의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친인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도 시장화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다음의 몇 가지 영향을 북한 사회에 미칠 수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의 정책이 핵 우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친인민정책과 더불어 김정은 정권의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대외적인 중요 사건이나 결정 등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도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조선중앙TV』 등 주요 매체를 통하여 즉시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공식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공식 정보와 문화의 북한 내 유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외부의 정상회담 평가도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핵보다 경제를 중시한다는 당국의 의지를 주민들이 확인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고조시켜 향후 경제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실적인 개방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남북한 예술단의 교환 방문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남한 문화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로동신문』 일면에 머리를 염색하고 청바지를 입은 남한 예술인과 김정은이 같이 찍은 사진이 실렸다는

4) KBS가 2018년 4월 30일 시행한 여론조사(<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2525&ref=D>, 검색일: 2018. 5. 9).
5) 한승완, 「국가사회주의의 시민사회론 재고」, 『사회와 철학』, 제28호, 2014.

것은 북한에서 허용되는 남한 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판문점선언의 첫 구절에서나 기념식수한 나무 앞의 기념석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북한 언론에서 ‘국군’을 포함하여 남한의 공식 직함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개방의 수준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IV. 북미정상회담과 남북한 사회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북정상회담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남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비핵화 문제나 평화 체제 합의와 같은 뚜렷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북한 사회의 변화는 다소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은 남북한 화해 협력에 부정적인 보수적인 집단이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경우 자기분열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용할 것이고, 일부는 미국과 결별하면서 극단적 보수주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미국에 대한 적대시가 국가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국은 이에 대한 새로운 선전 전략과 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나, 미국의 수용은 일반 북한인민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 내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